

2020. 06

# 2020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요촌동)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 처 분 요 구 목 록

##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지적)			시 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시정 주의
총 건수	신분상 조	재정상 조	소계	회수	추징	기타					
17	-	3,998	6	3	2	1	8	-	-	3	-

##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연 번	건 명	처분요구			비 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계	17건		3,998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관리 소홀	주의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주의			
4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410		
5	통장 활동보상금 및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주의			
6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시정 (소화)	420		
7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8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주의			
9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2,585		
10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215		
11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업무 부적정	통보			
12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통보			

연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3	쌀/밭소득등 보전직불금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168		
14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5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부적정	시정 (회수)	200		
16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17	경로당 및 한울타리행복의 집 운영비 정산 소홀	통보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라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로 규정되어 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지원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함)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검사)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요촌동에서는,
  - ①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민간인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면서 행사 지원 참여자 명단이 계획서에 포함됨이 타당하고 어떤 형태로 참석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고 집행

- ②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성격의 현수막 제작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
- ③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나 지연하여 집행

위와 같이 세출예산 집행 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요촌동에서는,

- 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축하 케이크를 구입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미작성
- ②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
- ③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기재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관리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이며,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이다.
- 그리고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계약의 체결)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3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라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를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1항에 따라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96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더불어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27조(금액, 수량의 정정)제1항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

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하며, 제3항에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란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제1항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촌동에서는

- ① 현금영수증(200만원 초과) 및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승낙사항 작성 및 채주 날인 없이 다수건의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② 지출결의서상 내용 정정 시 그 자수를 란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함에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정함
- ③ 지출결의서 작성 시 관계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지출결의서 상의 발의 등 일부 날인을 누락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급자란에 다수 날인을 하지 않음.
- ④ 감사시작일 2018. 4. 1부터 현재까지 물품구입에 따른 검수조서를 첨부하지 않은 건이 다수 확인되었음.

위와 같이 세출예산 집행 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410,000원

[내 용]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럼에도 요촌동은 국내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①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미감액

② 여비 중복 지급

위와 같이 총28건, 41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과지급 된 410,000원은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통장 활동보상금 및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명된 통장·이장·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을 규정하고 있다.
- 「김제시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 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럼에도 요촌동은 통장 활동보상금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420,000원

[내 용]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의 [별표1] 기준에 의하면, ① 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②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과 관련된 [별표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①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 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②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③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④지방자치 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의 용역계약 ⑤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요촌동은 공채 매입액 총420,000원을 미소화 하였으며 총140,000원을 과소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공채 420,000원은 즉시 소화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사업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지방제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예산이용 : 지방의회 승인, 예산전용 : 자치단체장, 예산변경 : 실·국장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18~19년도 지역개발사업 이월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변경을 건설과로 요청은 하였으나, 예산변경(부기변경) 등

행정절차(승인 등)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행해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콘크리트포장공사함에 있어 다짐도 향상을 위한 필수 공정인 살수차(5,500L) 살수 공정을 감독함에 있어 출장 결과보고서(공정확인) 및 준공도서에 증빙자료(살수차 임대) 없이 준공처리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2,585,000원

[내 용]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대하여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그 법인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 읍·면·동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태조사 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세율을 적용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하나,
- 요촌동에서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대장 정비 소홀로 인하여, 주식회사 ◇◇◇ 등 11개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2,350,000원, 지방교육세 235,000원 합계 2,585,000원이 과세 누락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2,585,000원은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214,800원

[내 용]

○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에 의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 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하나,

○ 요촌동에서는 재산분 주민세대장 정비소홀로 인하여, ○○○○ 1건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214,80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214,800원은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업무 부적정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세대원,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그리고 주민등록사무편람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처리 요령”에 따르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란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및 현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은 자필서명(한글)을 써야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2018.04. ~ 2020.04. 감사일 현재까지 위임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면서 위임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위임자 서명란에 통상적인 사인이 되어 있는 등 주민등록 등·초본 37건에 대해 발급요건이 충족 되도록 보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금구면

[제 목] 인감증명서 이송처리 업무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 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민법 제6장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서는 기간 기산점 및 만료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제155조(본장의 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산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이에 따라 구 증명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하여 신증명청에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할 경우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송 요청을 받은 날 포함)에 인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

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 기간을 산정할 시 이송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되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만료일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인감대장을 이송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송부 하도록 한 것은 전출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가 생길 경우 전입지에서 인감변경신고 등을 즉시 처리·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 요촌동에서는 전출자에 대해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처리하지 않고 최장 44일간을 지연 이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부적정 지급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168,120원

[내 용]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 또한,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의 실경작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김제시 \*\*\*번지의 1필지(485㎡)가 일부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잡종지, 농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총 2필지에 대해 168,12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직불금 168,120원은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농지법 제10조, 제49조제2항 및 제54조와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부재지주 소유 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서 전수조사 등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농지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 후 김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감사기간 중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부재지주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수령내역과 대사한 결과 총 3건 11,481㎡에 대하여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농지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보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필지들을 누락 제출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200,000원

[내 용]

- 2018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생생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생생 카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관련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자가 문화누리카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공문[농업정책과-10412(2019.5.22.)]을 읍면동에 발송하였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총 2명이 문화누리카드를 2018. 2. 26일 발급받았음에도 2018년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선정하여 보조금 200,000원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중복지원 된 200,00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사후관리)에 의하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또한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보조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연1회 이상 사후점검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요촌동에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등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를 하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연1회 이상 사후점검 기록이 없는 등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김 제 시

[부서·기관명] 요촌동

[제 목] 경로당 및 한울타리행복의 집 운영비 정산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 「김제시 경로당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경로당 지원) 및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실적보고서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19조(교부조건)에 의거 국비(난방비,냉방비,양곡비) 및 도비(운영비,간식비) 별도지급에 따른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함에도 요촌동에서는 2018년 경로당(한울타리 행복의 집 포함)에 대한 정산검사에 있어 일부 정산서에 영수증등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특히 냉·난방비(국비)의 경우 목적사업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해야하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